고이즈미 8·15 도발

정부·정치권 반응

"동아시아에 대한 선전포고"

"負의 유산 되지 말게…" 日차기 지도부에 경고

"노골적 도발행위" 대권 주자들도 일제히 규탄

정부는 15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에 대해 강력히 비난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추규호 외교통상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일본의 책임있는 지도자들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한일 양국의 우호관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협력을 저해하는 일이 다시는 없게 되기를 재차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제1차관은 해외 출타중인 반기문 장관을 대신해 이날 오전 11시 오시마 쇼타로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시하고 이를 본국 정부에 전달토록 했다.

유 차관은 이 자리에서 "우리 민족이 제국주의 식민 지배하에서 해방된 광복절 아침에 고이즈미 총리가 신사참배를 강행한 것은 우리 국민의 감정을 심대하게 손상시키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일본측이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받아들여 앞으로 이 문제가 한일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비공식 브리핑에서 "일본 총리가 공약 이행 차원에서 막무가내식으로 신사를 참배한 것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고이즈미 총리 이후 일본 외교에 '부(負)의 유산'으로 남지 않기를 간곡히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를 참배하는 한 한일정상회담은 열릴 수 없다는 정부의 방침이 유지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라종일 주일대사도 이날 일본 외무성을 항의 방문했다.

정치권도 이날 "군국주의 부활을 시도하려는 망동이자 외교적 도발행위"라며 일제히 규탄했다. 여·야 정당뿐만 아니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이명박 전 서울시장, 고 건 전 총리 등 대권 주자들도 참배 강행을 강도높게 비난했다.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은 "평화를 원하는 국민은 물론 동아시아 시민에 대한 노골적인 도발행위이자 동아시아와 일본이 불화한다는 선전포고로 보인다"면서 공동대책 마련을 위한 5당 대표회담을 제안했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논평에서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시대착오적 망동"이라며 "스스로 국제적 지도자 반열에서 물러나서 군국주의를 부활하는 망동"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이상열 대변인은 "주변국들의 깊은 우려와 거듭된 항의에도 불구, 참배를 강행한 것은 자신들의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동아시아의 평화를 저해하는 행위"라며 정부의 강경한 외교적 대응을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김성희 부대변인도 "야스쿠니 신사 참배 강행은 일본이 갈등과 대결의 시대로의 물꼬를 트는 행위"라며 일본의 침략주의 부활을 저지하기 위한 국제평화세력의 단결을 강조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복절인 15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국학원 청년단과 온라인 사이버의병 회원들이 광복 61주년 기념 '태극기 꽃이 피었습니다' 행사를 갖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있다. 아래는 한국외교부에 초치당한 오시마 쇼타로 일본 대사. /연합뉴스

야스쿠니 참배 논란 일지

1879	도쿄 쇼콘샤(招魂社), 야스쿠니(靖國)신사로 개칭
1945.12	연합국 군총사령부(GHQ), 신도지령'으로 국가신도 폐지
1951. 10	요시다 시게루(吉田茂)총리, 야스쿠니 참배
1978. 10	도조 히데키(東條英機) 등 A급 전범 14명 비밀리 합사
1979. 4	언론, A급 전범 합사 사실 보도
1985. 8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총리, 첫 8.15 야스쿠니 공식 참배. 한국, 중국 등 반발로 A급 전범 분사(分祀)론 부상
1986. 8	나카소네 총리, 주변국 고려 8.15 참배 중지
1996. 7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郞) 총리 참배로 주변국 강력 반발
1999. 8	노나카 히로무(野中廣務) 관방장관, A급 전범 분사 및 야스쿠니 신사 특수법인화 언급
2001. 4	고이즈미 총리, 8.15 참배 공언
2001. 8.13	고이즈미 총리, 야스쿠니 전격 참배
2002. 4.21	고이즈미 총리, 재임중 2번째 참배
2003. 1.14	고이즈미 총리, 재임중 3번째 참배 단행
2004. 1. 1	고이즈미 총리, 재임중 4번째 기습 참배
2004~2005	후지타 요시히로(藤田) 中 주석, 노무현 대통령 참배 중지 촉구
2005. 9.30	오사카(大阪)고등법원 총리 참배 '위헌' 판결
2005.10.17	고이즈미 총리, 재임중 5번째 참배
2006. 5.9	일본경제동우회, 총리 야스쿠니 참배 반대입장 표명
2006. 6.23	최고재판소, 야스쿠니 위헌소송 상고 기각
2006. 4.15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장관 비밀 참배
2006. 7.20	고 히로히토(裕仁) 천황 A급 전범 합사 '불쾌감' 표명 메모 언론 보도
2006. 8.15	고이즈미 총리, 현직 총리로 21년만에 종전기념일 참배

연합뉴스그래픽

日 우경화 기류 편승 강행

■ 참배 배경과 파장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예상돼온 일이었다. 고이즈미 총리는 올해 종전기념일인 8월15일이 다가오면서 참배 의사를 기회있을 때마다 표명해왔다. 지난 2001년 자민당 총재선거 때 제시했던 공약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였다.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의 반발에 대해서도 "언제 참배를 하더라도 비난을 받는다. 언제 참배를 해도 마찬가지다" "공약은 살아있다.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인접국에 대한 배려보다는 공약준수를 중시했다. 자신의 참배로 한·중 양국과의 정상회담이 중단되는 등 외교적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야스쿠니 참배를 문제 삼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오히려 주변국의 반발을 비난했다.

◇**참배 배경**=고이즈미 총리는 지난 2001년 자민당 총재선거 때 "종전기념일에 반드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겠다"고 공약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취임후 해마다 한 차례씩 야스쿠니를 찾았다. 첫해엔 종전기념일 이틀전인 8월13일 참배하고 2002년 4월, 2003년과 2004년 1월 참배한데 이어 2005년 10월에 참배했다. 종전기념일 참배는 주변국의 반발과 국내 비판을 의식해 피했다.

그러나 이번 참배는 종전기념일에 이뤄졌다.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에서는 일제의 식민통치와 침략에서 해방된 매우 의미있는 날이다. 파장이 클 수 밖에 없다.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는 일본의 우경화 기류와도 맞물려 있다. 재임중 국민적 인기에 편승, 국정을 이끌어온 그로서는 국민들 품고있는 생각을 파악해 그대로 따랐을 뿐이다. 얼마전 한 언론사 여론조사에서도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총리의 참배가 괜찮다는 반응을 보였다.

고이즈미 총리는 재임중 아시아는 경시하면서 철저히 대미 중시 외교를 펼쳤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미국 경제의 회복에 힘입어 일본 경제를 불황의 수렁에서 살려냈다.

◇**외교적 파장**=한국과 중국 등 주변 각국의 반발이 어느 때보다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고이즈미 정권이 들어선 뒤 영토와 역사 교과서 문제까지 겹쳐 악화될 대로 악화된 인접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가 더욱 나빠질 것이 뻔하다.

다음달 퇴임하는 그의 후임자로 사실상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장관의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 후임 총리가 될 아베 장관 역시 지난 4월 야스쿠니 신사의 '춘계 대제'에 앞서 비밀리에 참배했던 사실이 최근 밝혀지면서 비난을 자초한 바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日 패권주의에 강력한 경고

한국 역량 키울 국민통합 강조

盧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61주년 경축사를 통해 과거 분열과 대결의 역사가 남긴 상처를 치유하고, 국민통합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미래로의 도약을 강조했다. '통합'을 '키워드'로 한 이날 경축사는 국내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을 향한 메시지도 함께 담겨 있었다.

미래 전진을 향한 통합의 걸림돌로 국내의 갈등과 대립의 정서와 문화는 물론, 남북관계의 긴장과 대립, 동북아의 대결적 질서 등 불안정한 주변 지역 정세도 함께 거론됐다.

그러면서 각 부문의 '대결구조'를 청산하기 위한 비전으로 ▲남북관계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최우선을 둔 상황관리 ▲동북아 지역에서 진영·대결구도 해소를 통한 새로운 통합질서 구축 ▲국내적으로 극단주의 비타협 노선이 아닌 통합 노선의 강화 등을 제시했다.

◇**동북아 새 통합질서 구축 필요성**=노 대통령은 동북아 정세 진단을 바탕으로 새로운 동북아 통합질서를 구축하는 비전에 많은 내용을 할애했다. 특히 동북아 질서를 불안하게 하는 일본의 우경화 움직임에 대해 노 대통령은 강한 경고 메시지를 담았다.

노 대통령은 일본의 개헌을 위한 선결조건으로 ▲독도 ▲역사 교과서 ▲야스쿠니(靖國) 신사참배 ▲일본군위안부 등 4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이 같은 요구는 새 제안은 아니지만,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명시적으로 언급됐다는 점에서, 한일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필요충분 조건으로 해석될 수 있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보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동북아의 잠재적 대결구조'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의지도 천명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서로 진영을 가르고 진영끼리 뭉쳐서 상대방을 불신하고 견제하는 자세로는 대결의 구조를 해소할 수 없다"며 과거 냉전 질서에 입각한 사고와 인식의 타파를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 타개를 위해 "우리가 먼저 중심을 잡아야 한다"며 한국의 의지와 역량 강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우리의 운명은 과거처럼 강대국의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자주방위역량 강화를 바탕으로 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의 당위성도 거듭 역설됐다.

◇**한반도의 평화·안정적 관리 최우선**=노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대북포용정책'의 기조를 재차 확인했다.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거부하고, 최근 북한 미사일 발사로 새로운 국면이 조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분단상황의 지혜로운 관리'를 위한 대원칙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는 "조건없는 6자회담 복귀"를 촉구했고, 미국을 비롯, 6자회담 당사국들에 대해서는 "회담의 재개와 진전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대화를 시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여·야 의원들 야스쿠니 신사서 수모

일본 경찰 뒷문 입장 유도

우익단체 심한 욕설·야유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회의원들이 야스쿠니 신사에서 우익단체와 일본 정부 관계자들로부터 수모를 당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국회 '민족정기 바로세우기 의원 모임'의 한나라당 고진화 의원은 15일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야스쿠니 현장조사단'이 지난 12일 야스쿠니 신사를 방문했을 때 우익단체 관계자들로부터 심한 욕설과 야유를 들었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당시 우익단체는 현장조사단에 대해 '조센징은 조선으로 돌아가라' '한국 국회의원들이 왜 신사에 오느냐'는 등의 모욕적인 언사를 쏟아냈다"며 "신변의 위협까지 느낄 정도였다"고 말했다.

특히 당시 일본 경찰이 안전 문제를 이유로 진상조사단을 정문이 아닌 '뒷문'으로 입장하도록 유도하는가 하면 일본 정부가 현장조사단 접견을 위해 계장급 직원을 파견하는 등 외교 관례에 어긋나는 행태를 보였다고 그는 주장했다. 현장조사단은 광복절을 앞두고 야스쿠니 신사의 실태와 한국인 합사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11일부터 2박3일간 일본을 방문했다.

현장조사단에는 김희선, 유기홍, 강기정, 임종인 등 열린우리당 의원 11명이 참석했으며 야스쿠니 신사에는 이중 10명이 방문했다.

/최진만기자 man21@kwangju.co.kr